

## 금융정책으로 본 1970년대 중화학공업정책

### — 재고와 시사점 —

박 영 구

---

---

본 논문의 목적은 1970년대 중화학공업 금융지원에 대한 엇갈린 견해를 평가하는 것이다. 중화학공업에 대한 금융집중은 첫째, 과장 평가되어 있고, 둘째, 수출금융등과 비교할 때 타 부문과 매우 차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금융지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첫째, 취약한 자본시장하에서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중화학공업의 성격상 높은 금융비용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는 현실과, 둘째, 지원산업이 해외에서 경쟁적이었던 성격 탓에 대체로 효율성에 접근하는 지원이 되었으므로 자원배분에 크게 어긋나지 않았다는 점에, 셋째, 지원정책이 금리라는 가격정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추가할 수 있다.

---

---

### I. 머리말

중화학공업화는 특정산업을 위한 선별적 지원을 수반하였다. 경쟁산업의 기초조차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았던 1960년대 산업정책은 여전히 유아적 단계로 총괄적인 지원정책, 보다 구체적으로 총괄적인 수출지원정책이 우선이 될 수밖에 없었다.<sup>1)</sup> 그러나 섬유등 경공업을 중심으로 한 기본산업이 만들어지면서

---

부산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동 55-1, 608-738.

- 1) 정부는 제2차 경제개발계획에서 ① 외화가득률이 높고, 수출산업으로서 개발욕성이 비교적 용이한 산업부문, ② 다른 산업과의 연관효과 및 고용효과가 높은 산업부문, ③ 장래 자립

1970년대에는 전략적인 특정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정책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특정 산업에 대한 산업정책적인 지원은 크게 재정, 금융 그리고 해외부문 보호로 나누어지며<sup>2)</sup> 이러한 지원정책은 선·후발 공업국을 막론하고 초기 산업발전 단계에서 자본축적의 단축이나 추격, 추월을 위해 일반적으로 이루어졌다. 일본의 경우만 보아도 직접보조, 조세제도 지원 등 재정지원, 신용의 차별적 배정등 금융지원, 그리고 외국기업으로부터 국내산업의 시장 보호등 해외부문 보호와 기타 정부구매 지원등의 개별산업 지원 산업정책이 실시되었다.<sup>3)</sup>

본 논문에서는 1970년대 중화학공업에 주어진 지원정책을 선행적인 재정부문에서의 연구에<sup>4)</sup> 이어 금융을 중심으로 중화학공업에서의 정부역할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금융만을 보는 이유는 첫째, 이제까지 중화학공업 지원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금융집중에 있었기 때문이고, 둘째, 정부는 1970년대에 점차 재정의 역할을 감소시키면서 주요 정책 기제를 금융으로 돌렸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이제까지 중화학공업에 관련된 연구에서 '중화학공업의 중요한 지원은 바로 금융의 집중'이었고<sup>5)</sup> '중화학공업의 육성에는 한국정부의 다양한 금융유인 제공'이 있었다고<sup>6)</sup> 지적되어져 왔다. 이러한 인식이 있었기에 1980년대 이후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대국민 광고를 위해 중화학공업을 비판할 때면 언제나 금융지원액의 삭감 혹은 중단이 논리로 사용되어져 왔다.<sup>7)</sup>

---

경제 달성의 기반이 되는 기초산업부문의 육성강화를 방침으로 하여 각종 중점산업육성법을 1966~1970년대에 걸쳐 제정하였다. 그 결과 석유화학육성법(1966), 기계공업진흥법(1967), 조선공업진흥법(1967), 전자공업진흥법(1969), 철강공업진흥법(1970)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의도와 달리 실질적인 산업육성의 가능성이나 실행의지는 회의적이었다.

2) 이외에 진입규제를 주요한 정부의 산업정책으로 지적할 수 있다. 하지만 진입규제는 대부분의 경우 해외부문의 보호와 중복되어 나타나고 나아가 재정, 금융 수단과 결합되어 나타난다. 기타 행정지원의 경우도 이와 동일하다. 참고로 중화학공업만이 아니라 섬유등 경공업의 산업육성법에서도 진입규제가 행해졌다.

3) Noland [49].

4) 박영구 [22].

5) 중화학공업은 경공업에 비해 자금접근도가 높았고 자본비용도 훨씬 낮았다고 인정되어져 왔다. 이기영 [24].

6) Pack and Westphal [51]. Westphal, Rhee and Pursell [61].

본 논문에서는 우선 정부의 역할에 대한 그 동안의 논의를 정리하고 이어 1970년대 중화학공업정책에 비판적인 연구들이<sup>8)</sup> 보여주는 논지를 다시 검토해 나가면서 오늘날 한국경제에 주는 역사발전론적인 시사점을 찾아보도록 한다.

## II. 정부역할에 대한 기존 연구와<sup>9)</sup> 고려할 점

한국 혹은 동아시아에서의 정부역할에 대한 평가는 많이 소개되고 있고 알려져 있다. 한국을 포함하는 동아시아의 경제성장이 정부정책, 즉 보호주의, 수출 주도형 정책에 힘입은 것이었다는 주장은 지속적으로 공감을 얻고 있는 결론이다.<sup>10)</sup> 넓게 보아 수정주의(Revisionist View)로 함께 분류될 수 있는 이들 정부 개입론자들은 후발공업국의 경우 생산의 외부성이 크고, 신용의 제한이 컸던 등 시장이 불완전하게 작동하고 있었던 점과, 시장에서는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이 불공정한 거래를 하고 있었던 점을 지적한다. 그래서 시장의 과도성을 조정하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불완전한 자본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지속되었으며 심한 경우 정부는 산업의 성장을 위해 가격유인체계를 왜곡까지 하였다고 보았다. 실질적으로 이들에 의하면 중점육성 대상 산업의 생산성이 분명히 높았으며 강한 정부가 산업근대화의 주요한 추진력이었다.<sup>11)</sup> 따라서 이들은 신고전학파의 견해는 적어도 한국, 대만, 일본에 적용할 때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7)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 발표문에서 여러 번 이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산업개입의 합리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國家保衛非常對策委員會 商工資源分科委員會 [4] 7. <보도자료>, pp. 10~11.

8) 대기업측의 자료와 1980년대 초의 KDI 자료들을 포함하는 대부분의 연구들이 그러하다. 대표적으로 뒤에 인용할 韓國開發研究院 [31]이 있다.

9) 이병기 [25]의 정리는 매우 뛰어나다. 본 절과 뒤의 보론 작성에서도 이병기의 정리가 많은 도움을 주었다.

10) Pack and Westphal [51], Amsden [38], Wade [60], Krueger [42], World Bank [63], Kwon [45], Rodrik [55].

11) Kwon [45].

그러나 아시아의 허상으로 논의를 시작한 비주류(Contrarian) 경제학자들은 동아시아의 성장이 생산요소의 투입확대에 의한 것이었다는 측정결과를 제시하였다.<sup>12)</sup> 그 결과로 이들은 동아시아 NIEs의 성장은 자본 및 노동이라는 생산요소의 양적인 투입증가에 의해 설명 가능하며 수정주의가 강조하는 정부의 정책은 그 중요성이나 의미가 매우 작다고 보았다. 심지어 홍콩에 비해 싱가포르의 낮은 총요소 생산성 증가는 정부의 개입, 산업정책, 즉 차별적인 금융지원, 건물 및 토지 대여비용의 인하, 노동교육비용의 정부책임 등 정부의 개입 때문이라고 보았다.<sup>13)</sup>

이러한 주장은 1990년대 말 아시아의 외환위기로 큰 주목을 받았지만, 사실 아시아의 외환위기와 상관없이 이들 주장은 논리적으로 사전적인 동의가 충분히 가능하다. 한국의 경우 그 동안 정부의 역할이 아무리 컸다고 해도 경제운영의 제일 주체는 분명히 기업이었으며 성공의 공과 역시 일차적으로 기업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것이 당연히 맞기 때문이다. 계획경제가 아닌 이상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동아시아 역시 동일하다. 즉, 정부의 역할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때문에 경제성장이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한계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역으로 정부의 역할 때문에 경제성장이 근본적으로 정체되었다는 주장도 분명히 그 자체로 이미 한정적인 한계를 갖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sup>14)</sup>

총요소생산성 문제 역시 방법론적으로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는데(〈보론 1〉 참조) 실질적으로 한국을 대상으로 한 측정결과는 매우 다양한 결과를 보여

12) Krugman [43], Kim and Lau [41], Krugman [44], Young [65], Young [66], Kim and Lau [41]는 동아시아 국가 성장의 주요원천으로 경제성장의 48~72%를 자본축적으로 설명하고 노동의 성장기여도는 13~23%로 한국은 자본 67%, 노동 19%, 기술진보가 14%라고 설명하였다. 반면 프랑스, 서독, 일본, 영국, 미국 등 5개 선진국은 노동기여도에서는 프랑스 -1, 서독 -7, 일본 6, 영국 4, 미국은 28%로 차이가 있지만 기술진보가 경제성장의 46~71%를 설명한다고 대비하였다. Young [64] [65]은 홍콩(1966~1991), 싱가포르(1970~1990), 한국(1966~1990), 대만(1966~1990) 등을 사례로 총요소생산성을 측정하여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낮았다는 추정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동아시아처럼 단축된 성장에서 이러한 결과는 당연하다. 압축된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공업화로 상징되는 자본축적이며 동아시아 국가들은 장기간 자본축적의 역사에 실패함으로써 압축된 자본축적을 추구한 공통점이 있다.

13) Young [64].

14) Romer [56], Lucas [48].

주고 있으며 나아가 반대의 해석이 가능한 결과도 최근 주류(Non-Contrarian) 경제학자들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다.<sup>15)</sup> 낮은 총요소생산성으로 측정되고 개입정책의 한계로 지목된 싱가포르 역시 현재 국가경쟁력에서 최상위에 언제나 평가 받고 있고 각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sup>16)</sup>

신고전학과 견해(Neo-classical view)는 당연히 정부의 역할을 소극적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견해는 정부의 역할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지만, 아시아의 경제발전이 주의깊게 스스로를 통제해 나간(carefully delimited) 정부의 한정적 개입주의 결과라는 시장친화주의자(market-friendly view)들과 연결된다. 한국정부는 재산권 제한과 공공재 공급에 개입했고, 안정적인 환율을 위해 노력을 했지만, 성장은 주의 깊은 정책의 결과이며 정부의 역할은 시장이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할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을 정비하는 데 머물렀다는 것이다. 즉, 정부의 역할이 시장 활성화를 위한 것, 인적자본 적정투자, 기업을 위한 경쟁적 환경의 조성, 국제무역 개방,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이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아시아 경제발전에서 시장이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정부의 역할은 결정적이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서 동아시아의 성공은 시장개입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시장개입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이라는 명제가 만들어졌다.<sup>17)</sup> 실질적으로 초기 견해인 Wolf, Jr. [62]는 두 가지 점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첫째, 홍콩, 한국, 대만 등은 정책의사 결정시 정부의 역할을 제약하는 의사결정과 정책으로 크게 이득을 보았으며 대신에 시장이 그 불완전성과 결점에도 불구하고 자원배분을 결정하는 데 있어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둘째, 한국과 대만 정부는 낮은 물가상승률 유지, 비교적 안정적인 거시경제환경을 제공하였고 이들 지역은 실질환율이 거의 상승되지 않았으며 수입대체공업화도 짧은 기간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기업들이 상대가격보다 생산성을 향상하는 데 집중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선택적인 산업정책에 조심스러웠고 또 반대하였다는 결론 속에서도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에 대해서는 예외로 보는 시각이 여전하다.

15) Sarel [57].

16) IMD [40].

17) World Bank [63].

예컨대, World Bank는 “한국의 선택적인 육성산업은 중화학공업부문이었고 중화학공업정책의 추진비용은 아직까지 완전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비용은 매우 컸다”고 하여 중화학공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입장을 밝혔다.<sup>18)</sup> 이는 중화학공업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공통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한국의 기존 통설이 너무 강고하고, 또 ‘중화학공업과 관련된 정부의 큰 역할’이 분명한 상으로 모든 연구에서 선형적으로 이제까지 받아들여지면서 이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것은 한국에서의 그 동안 1970년대 중화학공업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정부역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과 정부개입의 과도성을 문제점으로 견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결국 중화학공업화 정책은 제조업 성장을 지체시키는 효과까지 있었음도 시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성순 [26]은 정부의 특정 산업 육성정책이 실시된 1973년부터 1978년에 시장기능이 크게 왜곡되고 약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1978년부터 1983년에 시장기능이 어느 정도 회복되어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미친 기여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았다. 유정호 [23]는 정부의 산업정책이 생산성 향상이나 경쟁력 강화를 가져다주지 못했으며 중화학공업군은 1970년대 중반에 자본집약도가 빠르게 증가한 반면 경공업군은 하락하거나 거의 증가하지 않았고 중화학공업군의 자본효율성은 1970년대 경공업에 비해 훨씬 낮았는데 이는 중화학공업에 대한 과잉투자 때문이라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연구들이 갖고 있는 측정방식에도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가능하고 따라서 방식과 변수에 따라 다른 결론도 가능하지만, 설사 지적하는 현상 자체가 맞다고 하더라도 인과관계에서 볼 때 문제가 있다. 우선, 경공업의 자본효율( $Y/K$ )이 높았던 것은 경공업이 중화학공업보다 생산효율성이 높았기( $Y$ ) 때문이라기보다 분모값인 경공업의 자본축적이 거의 일어나지 못했던 때문이고, 이는 대기업들의 산업선택에서의 편식 때문이었다. 중화학공업의 효율성이 낮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는 대기업집단들의 집중적인 단기간 진입이 정책 자체보다 더욱 중요한 요인이었고 이 점은 측정된 바가 있다.<sup>19)</sup> 또 생산성·효율성은 글자 그대로 결과만 보여주는 것이므로 당시의 정부 문서와 관련 문서 등 정책을

18) World Bank [63].

19) 박영구 [12].

실질적으로 검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과관계를 정책으로 귀결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sup>20)</sup>

실질적으로 최근에 들어와 중화학공업화 시기에 대한 다른 측정과 해석이 제기되고도 있다. Lee [47]는 총요소생산성을 측정하여 총요소생산성 증가가 1972년부터 1980년 기간에 나타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었다. 대부분의 자본집약적인 산업은 기술진보를 통해 생산증가가 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대부분의 노동집약산업은 1972년부터 1980년 기간에 생산성 증가를 보이다가 1980년부터 1990년에야 생산성 증가의 저하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즉, 한국의 비교우위가 적어도 1970년대 초 정부에 의해 이루어진 자본집약적인 부문에 의해 지배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면서 World Bank는 선택적인 정부개입의 가치와 중요성을 과소평가했다고 보았다.

이러한 새로운 해석, 새로운 시각이 제기되면서 연구의 급진전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에도 역시 정부 역할에 대한 논쟁에서 그러했듯이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에서만은 정부의 역할이 컸다는 합일은 그대로 받아들여지거나 심지어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에 대해 다음의 몇 가지 점에서 의문점이 있다.

우선 1970년대 우리 나라의 중화학공업의 비중에서 볼 때, 중화학공업과 한국경제는 별개로 취급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둘째, 근본적으로 Stern, Kim, Perkins and Yoo [58]도 잘 지적하고 있듯이 정부 개입의 전체적인 효과란 분명히 의문시된다. 따라서 정말 정부의 역할이 그 정도로 강력하고 일방적이었다면 적어도 역사적 사실로 입증된 X-비효율이나 이론적으로 증명된 비효율성이 발현되었을 것이고 이것이 '분명한' 부정적 영향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충분히 공감되는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의 한국경제는 정부가 목표로 한 높은 수준의 정책목표들을 초과하여 이루어 왔다는 점에서 역시 정부역할에 대한 의문점이 남게 된다.

셋째, 만약 정부의 개입이 그렇게 강력한 것이었다면 그런 중앙집중적이고 계획적인 정부하에서 그렇게 문제가 되었던 중복투자는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는 점이다. 즉, 중복투자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계획적인 정부 주도가

20) 이런 점에서 보완책으로서의 경제사적인 접근방법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2001년 국제경제학회 재정분야 발표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는 기존의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에 당연히 의문점을 주게 된다.

넷째, 이미 1970년대 정부역할에 대한 비판이 학계에서 계속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후에도 이에 대한 비판은 전혀 의심의 여지없이 지속되었는데 왜, 그리고 정말 1970년대의 정부는 그렇게 정부개입을 계속했을까 하는 점이다. 당시의 정부는 의견을 수렴할 능력도 창구도 갖지 못했다고 보는 것은 적어도 1970년대의 정부를 설명하기에는 맞지 않는다. 그렇다면 정부는 단순히 지대추구행위(rent-seeking) 때문에 그렇게 잘못된 줄 알면서 정부개입을 계속했었던 것일까? 하지만 이미 인정되고 있듯이 1970년대까지의 경제관료들이 후발공업국은 물론 선진국, 혹은 오늘날과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는 엘리트 의식과 긍지를 가지고 있었던 점에서 역시 의문이다. 따라서 역시 당시 정부역할에 대해 사실과 다른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다섯째, 국영기업체 운영등 투자, 생산 주체로서의 정부 역할을 보면 우리나라 정부의 역할은 발전도상국 경제 중에서 아주 낮았고 이들 역할은 기업이 대부분 수행하여 대기업집단(재벌)이라는 구조가 발전하여 왔다는 점이다.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국영기업체의 점유비율은 남미가 20~40%, 아시아의 경우도 일반적으로 25%수준이었지만, 한국은 가장 낮은 국가 중의 하나로 10% 정도의 수준만을 유지하였다. 투자비율로 보아도 비농업부문 총투자 중 국영기업의 투자비율은 방글라데시, 볼리비아, 멕시코가 75% 이상이며 인도와 터키가 약 50%인 데 비해 한국은 25~33%수준에 머물러 있었다.<sup>21)</sup> 실질적으로 1960년대와 달리 중화학공업화 선언이 이루어진 1973년 이후 1970년대 중화학공업 부문에서 국영기업체는 '포항제철'과 '한국종합화학'뿐이었다.<sup>22)</sup>

여섯째, 우리 나라 정부의 산업개입은 과연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특별히 차

21) Gillis [39].

22) 1960년대는 민간 기업들이 수출을 축으로 하는 소비재, 경공업에 집중되어 있었고 대규모 자본이 요구되는 철강, 정유, 비료 등 주요 기간산업이나 중화학공업은 국영기업에 의해 주로 운영되었다. 이 국영 기업은 1960년 후반에 대부분 민영화되었다. 1968년에는 '대한조선공사', '대한해운공사', '인천중공업(주)', '대한철광', '한국기계', '대한통운'이 '극동해운', '한양', '인천제철', '삼미사', '신진자동차', '동아건설'에 각각 흡수, 민영화되었고 1969년에는 '대한항공공사'가 '한진상사'로 1970년에는 '석유공사'가 '선경'으로 인수, 민영화되었다. 한국산업은행 [32].



이점을 가지고 있었고 아시아 성장의 이론이 필요할 만큼 역할이나 정책이론, 정책기제가 달랐는가를 볼 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런 점을 염두에 두면서 그 동안 가장 문제가 되었던 금융정책 수단을 중심으로 1970년대 중화학공업을 재검토해 봄으로써 그 동안 논쟁에서 제시되었던 정부 역할의 평가라는 결과가 아니라 정책과정부분을 찾아내 보자.

### Ⅲ. 금융정책과 정책의 성격

#### 1. 지원비중

만성적인 금융의 초과수요가 존재하고 있었고<sup>23)</sup> 자본시장의 불완전성이 지속되었던 1970년대 상황에서 금융 지원은 그 자체로 매우 큰 지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중화학공업에 금융이 집중되었다고 하는 것은 정책자금에서<sup>24)</sup> 추계한 중화학공업으로의 대출현황에서 이미 나타난다. 중화학공업이 절정에 있었던 1978년 중화학공업에의 대출잔액 현황과 금융대출 총액에서의 비중을 정리해 보면 <표 1>과 같다.

<표 1>을 보면 대출잔액 합계에서 추계한 중화학공업 대출액은 전체금융대출액의 38.5~40.3%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금융이 중화학공업에 집중되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것이 과도한 지원이었던가를 보기 위해서는 기존과 같은 절대금액의 비율이 아니라 당연히 산업의 공헌도, 효율성과 대비해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공헌도, 효율성이 높은 부분에 금융이 이동하는 것은 합리적인 자원배분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이며 오히려 시장기구의 가장 중요한

23) 근본적 이유는 높은 인플레이션율이었다.

24) 금융 전체에서 차지하는 정책금융의 비중은 1977년 48.6%, 1978년에는 51.5%에 이르렀다. 남종현 [9], 이해주 [28].

〈표 1〉 중화학공업 대출잔액 현황과 비중(1978)

(단위: 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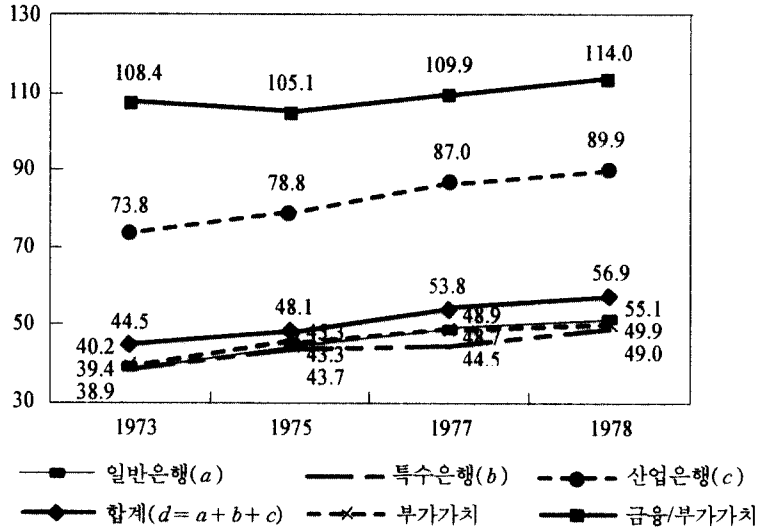
중화학공업 일반	904.0	3.4
화 학	1,338.9	5.1
비금속광물가공	555.7	2.1
1차 금속	1,263.6	4.8
금속기계, 장비	6,115.0	23.2
중화학공업 합계	10,177.1(15,229.3)	38.5(40.3)

주: 1) 구성비는 전체금융대출 내 비중임. 2) 괄호 안은 1979년 값임. 3) 국민투자기금, 산업합리화자금(1975년 이후 중단), 기타산업은행 대출, 수출입은행 延拂輸出支援 및 예금은행의 機械工業育成資金의 합임. 4) 일반수출지원금융과 중소기업자금은 분류, 추계상의 문제로 제외함. 5) 화학은 산업용화학과 석유정제를 따로 구분하지 않아 과대평가되어 있음.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1974~1981. 한국은행, 『국민투자기금통계』, 1974~1980. 한국개발연구원,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연구보고 82-05, 1982.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부가가치가 높은 곳에 금융이 집중되는 것은 자립적 자본축적 실패와 자본 공급병목이라는 경제사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경우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필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이를 보기 위해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을 구분하여 효율성의 가장 일반적인 정의로 쓰이고 있는 부가가치와의 비율을 구해 대비해 보자. 계산가능한 총금융기관을 합하여 '중화학공업의 대출금 비중/부가가치 비중'으로 계산한 것이 〈그림 1〉이다.

여기에서 금융기관의 금융대출을 종합해 보면 일단 중화학공업에 대한 대출이 경공업보다 부가가치 대비 기준으로 보아 집중된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즉, 금융기관의 대출에서 중화학공업에 더 비중이 주어졌으며 특히 중화학공업이 절정에 있었던 1978년에는 14%까지 초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비율수준으로 볼 때 금융기관의 대출집중도는 기존의 인식처럼 '매우 심하다'고 할 수준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여기에서는 중화학공업대출을 최대한으로 추계해 보기 위해 국민투자기금, 산업합리화자금

<그림 1> 중화학공업의 대출금 비중/부가가치 비중(제조업)



주: 1) 경상가격임. 2) 중화학공업은 화학, 석유, 석탄,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제1차금속, 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이고, 경공업은 음식료품 및 연초, 섬유, 의복 및 피혁, 제재업, 목제품 및 가구, 지류, 지류제품 및 인쇄출판업. 기타는 제조업에서 제외함.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1979, 1981. 한국은행, 『국민소득계정』, 1987.

(1975년 이후 중단), 기타 산업은행 대출, 수출입은행 延拂輸出支援 및 예금은 행의 機械工業育成資金의 전체 합으로 잡았으므로 사실 과대평가된 것이고 따라서 이를 조정할 경우 그 초과비율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 2. 금융지원 금리

두 번째 다수의 금융지원 관련 비판은 금융지원의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분된 정책금융은 관련된 저금리로 배분되었는데 그 동안의 비판은 이 금리가 너무 낮게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예컨대 1978년 이전 6대 중화학공업분야에 대한 대출금리는 물가상승률과 비교해 볼 때 가격차에 따른 수익구조를 유지하

고 있었고 “시장금리가 17%가 넘는 가운데 12%로<sup>25)</sup> 중화학공업을 지원… 저금리로 중화학공업에만 집중지원하는 역금리체계를…”<sup>26)</sup> 만들어 냈다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자주 거론되는 시기인 1975년 중화학공업분야의 시설자금 대출금리는 연 12%였지만 인플레이션율은 25.3%였다.

일반은행 상업어음대출 할인율, 수출어음 대출금리, 인플레이션율과 대비하여 중화학공업 대출비율이 80~90%수준이었던 산업은행 주요산업 시설자금 대출금리,<sup>27)</sup> 국민투자기금 대출금리를<sup>28)</sup> 정리한 것이<sup>29)</sup> <표 2>이다.

여기에서 그 동안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중화학공업 대출금리라고 모두가 인식하고 비판하였던 것은 1970년대 전 시기가 아니고 1974년부터 1976년, 1979년부터 1980년임을 알 수 있다. 이 시기는 바로 유가충격이라는 해외구조적 요인 때문에 물가상승률이 15%를 넘었던 비정상적인 시기였다. 즉, 이 시기가 비정상적인 물가상승기였을 뿐, 1970년대에 중화학공업을 위한 중화학공업 시설자금의 대출 우대가 있었다고 일반화시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점은 일반 경공업등 모든 부분에 적용되었던 일반기업의 은행상업어음 할인금리를 보아도 역시 이 시기에는 대출금리가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에서 잘 알 수 있다. 실질적으로 외부충격이 소멸되고 중화학공업이 제 궤도에 들어서면서 대기업집단이 집중적으로 진입한 1977년, 1978년에는 중화학공업 우대 대출금리는 물가상승률보다 높았다.

중화학공업 우대 대출금리는 1970년 후반에 상승하고 있고 일반금리와 2.5~4%P로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더구나 중화학공업이 집중 대출받았던 중화학공업시설자금 우대 대출금리보다 더 낮으면서 전 공업이 혜택을 받았던 수출금융금리와 격차는 3 → 5 → 6 → 6~7%P차로, 또 금리가 더 낮았던 산업은행 재

25) 시장금리가 17%를 넘었던 것은 1977년 이후였고 산업은행 주요산업 시설자금이 12%였던 것은 1976년 이전으로 과장된 증언이다. 하지만 당시의 인식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26) 최동규 전 장관 증언, 김흥기 편 [8], pp. 264, 268~269.

27) 산업은행의 총 대출액에서 중화학공업에 대한 대출비율은 24.7~34.9%였다. 시계열 대출현황은 <부표 2>을 참조하시오.

28) 국민투자기금의 시계열 사용내역은 <부표 1>을 참조.

29) 1978년 정책자금 중 산업은행과 국민투자기금의 연말 대출 구성비는 15.7%, 14.9%였고, 1979년에는 16.5%, 15.4%였다. 한국은행 [35].

〈표 2〉 대출금리 비교와 물가상승률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일반은행 상업어음할인(1)	15.5	15.5	15.5	15.5	17~18	18.5~19	18.5~19	23.5~24
일반은행 수출어음(2)	7.0	9.0	7.0*	7.0	8.0	9.0	9.0	15.0
산업은행시설자금	10.0	10.0	12.0	12.0	13.0	15.0	15.0	21.0
국민투자기금(3)	-	-	12.0	12.0	14.0	16.0	16.0	22.0
물가상승률(4)	3.2	24.3	25.3	15.3	10.1	14.4	18.3	28.5
(1)~(3)	5.5	5.5	3.5	3.5	3~5	2.5~4	2.5~4	1.5~3
(2)~(3)	-3	-1	-5	-5	-6~-5	-7~-6	-7~-6	-7~-6
(4)~(3)	-6.8	14.3	13.3	3.3	-3.9~-2.9	-1.6~-0.6	2.3~3.3	6.5~7.5

주: 1) 산업은행시설자금은 주요산업 시설자금임. 2) 물가상승률은 전도시 소비자 물가상승률임.  
3) 모든 할인률, 대출금리는 6월 말 기준임. 4) 일반은행 상업어음 할인률에서 낮은 할인률이 우량업체 할인율임. 5) 1975년 일반은행 수출어음 대출금리(\*)는 원자재 수입금융에 대해서는 9% 적용되었음.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1976~1982.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1976~1982.

정 특수자금대출금리와 격차도 4.5 → 6 → 8%P로<sup>30)</sup> 1970년대에 더욱 확대되고 있다. 분명히 대기업집단의 진입이 확대된 197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중화학공업 금리의 우대성이 사라지고 있고 차별적 저금리는 중화학공업에서보다 모든 공업에서 더욱 오래 동안 잔존되어지고 있었다. 이런 점은 산업은행 시설자금이나 국민투자기금 저금리가 기존의 인식처럼 중화학공업에 대한 일방적인 '특혜'보다 오히려 초기 투자설비의 대규모성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중화학공업의 투자진입을 촉진하는 조치였다는 측면을 강하게 보여준다.

또 하나 지적해야 할 점은 자본시장이 개방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1970년대 후반 중화학공업 시설자금을 부여된 산업은행, 국민투자기금의 우대금리도 12% 이상 16%로, 이는 세계시장수준에서 볼 때 매우 높은 금리였다는 점이다.

30) 전력자금, 석탄자금, 공익사업자금, 해운자금 등에 대출된 산업은행의 특수자금 대출이자율도 중화학공업 우대금리로 대출된 산업은행 재정 시설자금 금리보다 평균 6%P 낮았으며 그 격차도 6월 기준 1973~1976년 4.5%P, 1976년 하반기 이후 6%P, 1980년 8%P로 확대되었다. 그 동안 중화학공업 시설자금의 우대금리만 지적되고 이런 점들은 지적되지 않았다. 한국은행 [35].

다시 말해서, 기업의 해외자본 직접차입이 원칙적으로 봉쇄되어져 있어 해외의 싼 저리자본을 이용할 수 없으면서도 해외시장을 목표로 생산을 하고 있는 산업에서, 가장 기본적인 시장가격 경쟁으로서의 국제금리수준으로의 금리인하 노력은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1970년대 중화학공업은 초기 단계였으며 또한 이 금리를 지원 받아 해외시장에서 경쟁함으로써 그 효율성을 검증받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는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어긋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중화학공업에서의 산업금융이나 초기 중화학공업의 초기 진입을 유도하기 위한 저금리 자체가 아니라, 1970년대 후반 대기업집단들이 기존의 중소기업들을 통합흡수, 독과점을 형성해 나간 이후에도 이들이 중화학공업이든 경공업이든 간접금융을 집중적으로 독점하여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즉, 문제의 초점은 중화학공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산업에 진입해 있는 대기업집단들이 검증받는 것 없이 간접금융을 마구 축적할 정도로 여러 이용가능한 저금리를 유지시켜 준 데 있었다. 집중된 금융의 이용이 검증되지 않았기에 결국 저금리는 역으로 대기업들의 재무구조 악화를 가져온 원인이 되어 한국경제의 기본적 장기병폐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결국 대기업의 간접금융 집중을 관리, 회수하지 못한 것이 문제이지, 중화학공업 '특혜' 저금리 혹은 중화학공업 금융 '특혜' 자체에 대해서는 보다 엄밀한 제한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은 금융시장이 충분히 발전하지 못한 경우 금리수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금융흐름을 투명하게 관찰할 수 있는 합리적 감독기구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함을 암시해 준다.

#### IV. 결 론

1970년대 중화학공업에 대한 금융 면에서의 지원성격과 평가는 다음과 같이 정리 가능하다.

우선 금융지원의 성격에서 볼 때 중화학공업에로의 금융집중은 ① 그 동안 특정 정책금융내의 절대금액으로 추산되어 과장되게 평가되어져 있었으며, ②

더 혜택이 주어졌던 수출금융, 재정특수자금 등과 비교하여, 또 효율성등 운용면에서 타부분과 매우 차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금융지원에 대한 평가는 ① 발전되지 않은 자본시장하에서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중화학공업의 산업성격상 초기 진입과 국제경쟁 유도 측면에서 볼 때 교역재 산업의 높은 금융비용이 존재했다는 현실과, ② 지원산업이 해외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검증이 가능한 산업이고 효율성에 비교적 일치하는 금융지원이었기에 경쟁 효율적인 자원배분 추구하고 차별적이지 않다는 점, ③ 금융 면의 지원정책이 금리라는 가격정책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과 기업진입의 본격화와 대외개방 확대에 맞추어 시장금리와의 격차를 줄이는 쪽으로 변화했다는 점에서 보다 긍정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한국은 분명 개별산업부문을 정부가 직접 담당하지 않고 금리등 적절한 시장인센티브를 주어 기업이 담당하도록 했으며, 이들 이용하는 기업이 국내외 시장을 적극 개척하도록 한 것은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적절한 것이었다고 평가 가능하다. 또 국제경쟁력이 없는 산업상태에서 국내시장을 우선 확보하고 비용을 낮추어 국제경쟁력을 갖추게 한 것도 성공한 후발공업국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차선의 방향이었다고 평가가능하다. 서구의 공업화 경험에서 확인되듯이 정부의 개입은 당시 시장발전 정도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상대적 문제이며 결국 이런 문제의식 없는 일방적인 정책책임론은 대기업 면죄부나 혹은 대신진국 교역에서 제로섬게임의 피해자가 될 위험도 있다.

반면 단기적 산업효율성이나 장기적으로 중화학공업만이 아니라 모든 산업에서 진입 이후 혜택을 보고 있는 대기업집단에 대한 간접금융 집중을 완화시키지 못함으로써 국민경제 전체의 효율성이 약화되었다는 점에서 1970년대 금융정책은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점은 금리수준이나 금융정책보다 금융흐름을 자율적으로 통제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시장 혹은 비시장 기구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함을 암시해 준다.

〈부표 1〉 국민투자기금 사용내역

(단위: 억, %)

	중화학공업		전기 사업	석탄중산 사업	새마을 공장	합 계
	금 액	비율(/합계)				
1974	331	53.6	170	94	23	648.6
1975	858	49.0	602	214	79	1723
1976	1,927	55.7	1002	381	148	3365.7
1977	3,405	63.4	1385	424	154	5277.4
1978	5,672	65.7	2336	471	159	8544.7
1979	8,417	68.5	3175	514	178	12174.5
1980	10,417	67.8	4175	626	136	15285.8

주: 연말잔액 기준임.

자료: 재무부, 『재정부융자백서』, 1982.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1978~1982.

〈부표 2〉 산업은행 대출현황

(단위: 억, %)

	재 조 율			1차산업	3차산업	총대출액
	중화학공업		제조업 대출			
	금 액	비율(/총대출)				
1973	788	64.9	1214	159	1812	3185
1974	1,079	67.2	1607	184	2466	4257
1975	1,503	70.7	2127	200	3451	5778
1976	2,290	75.5	3033	200	4166	7399
1977	3,509	77.7	4515	229	5335	10079
1978	5,044	77.6	6499	298	7638	14435
1979	8,181	76.9	10637	312	10432	24381
1980	12,892	78.9	16341	287	14425	31053

주: 1) 연말잔액 기준임. 2) 광업은 1차산업에 포함시킴.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1975~1982. 한국산업은행, 『조사월보』, 1979~1985.



## 〈보론 1〉 총요소생산성과 동아시아 경제발전

총요소생산성 문제는 방법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 ① 자본스톡 증가율 추정의 문제점이 있다.
- ② 국민계정상의 자본소득 분배율과 노동소득 분배율 추정상의 문제점이 있는데 이는 성장회계 방식을 택할 때의 문제가 된다.
- ③ 기타 자본축적의 시작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 ④ 선정기간등에 따라 이 측정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 ⑤ 대부분 성장회계 분석결과에 유의적인 변화를 주지는 않지만 요소소득 분배율과<sup>31)</sup> 추정기간에 따라 완전 반대결과도 가능하다.
- ⑥ 생산함수에 따라서도 그 결과는 다르게 나온다. 왜냐하면 총요소생산성은 산출물의 증가와 투입물 증가의 잔차로 얻어지기 때문이다.
- ⑦ 산업정책의 유효성을 평가하기에는 1960년대는 적절하지 않다. 물론 1960년대에 산업정책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역시 본격적인 산업정책은 1970년대를 중심으로 해야 알 수 있다.
- ⑧ 부가가치모형을 사용하느냐 산출모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전자가 본원적인 요소투입과 분리하여 고려할 수 없는 중간재 투입을 고려하지 않음으로 과대평가된다.<sup>32)</sup>
- ⑨ 사용데이터에 따라 다른 결과가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민계정』을 사용하느냐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자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31) Young [64]은 상대적으로 높은 요소소득 분배율을 주었는데 실사값과의 격차가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32) Norsworthy and Malmquist [50].

실질적으로 한국을 대상으로 실증연구 결과는 매우 다양하다. 측정연구에 따라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도는 산출접근법으로 접근한 경우 대체적으로 5.1~10.9%, 부가가치접근법의 경우 4.4~36.0%로 매우 큰 차이를 갖고 나타났다.<sup>33)</sup> 그러나 같은 연구라도 산출접근법과 달리 부가가치모형에서는 역으로 생산성 기여도가 산출증가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측정모형의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도 있다.<sup>34)</sup>

나아가 대체적으로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도는 작았다고 평가와 달리 정반대의 해석이 가능한 결과도 최근 주류(Non-Contrarian) 경제학자들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다. Sarel [57]은 1975년부터 1990년의 홍콩, 대만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미국, 일본을 능가한다고 보았고 한국도 높은 수준이며 한국, 홍콩, 대만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산출성장률만큼 높음을 보여주었다. 싱가포르 역시 이들 국가보다 낮지만 그래도 세계평균보다는 높다. 실질적으로 총요소생산성 문제와 정부정책의 문제로 지적된 싱가포르는 이러한 결론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가경쟁력에서 최상위에 있다. 일인당 산출성장률에 대한 생산성 성장률 기여도를 보면 이 4개국은 일본, 미국의 생산성 성장과 유사하다. 이런 속에서도 한국의 자본축적률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은 이들 국가 중에서 압축성장의 과정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 참 고 문 헌 ▣

1. 경제기획원, 『외국인투자백서』, 1981.
2. \_\_\_\_\_, 『개발연대의 경제정책』, 1982.
3. 박승영, 『한국 제조업부문 생산성의 성장기여도 및 결정요인 분석』, 산업연구원, 연구총서 제11호, 1997.
4. 國家保衛非常對策委員會 商工資源分科委員會, <발전설비 및 자동차분야 통합

33) 김적교·손찬현 [7], 김광석·박승록 [5](부가가치 모형에서는 생산성 기여도가 산출증가보다 높게 역으로 나온다), 이성순 [26], 문희화·조병탁·황연호·김형범 [10], 박승영 [3], 이병기 [25].

34) 김광석·박승록 [5].

- 을 위한 투자 조정>, 1980. 8. 19.
5. 김광석·박승록, “우리나라 제조업의 생산성 변화와 그 요인의 분석”, 『연구총서』 5, 산업연구원, 1988
  6. 김낙년, “1960년대 한국의 경제성장과 정부의 역할”, 『경제사학』, 제27호, 1999, pp. 115~150.
  7. 김적교·손찬현, 『우리 나라 제조업의 생산성 분석: 1966~1975』, 한국개발원, 1979.
  8. 김흥기 편, 『비사 경제기획원 33년, 영욕의 한국경제』, 매일경제신문사, 1999.
  9. 남종현, “중화학공업”,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한국개발연구원, 1981, pp. 172~195.
  10. 문희화·조병탁·황연호·김형범, 『중요소생산성 측정(I): 제조업 27개 산업』, 한국생산성본부, 1990.
  11. 박영구, “정책시그널로 본 1970년대 重化學工業調整의 微視的 연구”, 『무역경영논집』, 제10집, 부산외국어대학교 무역경영연구소, 1994, pp. 5~28.
  12. \_\_\_\_\_, “중화학공업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1970년대 산업정책의 경제사적 연구”, 『經濟學研究』, 제43집 제1호, 한국경제학회, 1995, pp. 103~124.
  13. \_\_\_\_\_, “1980년 중화학공업 조정에 대한 경제사적 평가”, 『外大論叢』, 제14집, 부산외국어대학교, 1996, pp. 549~571.
  14. \_\_\_\_\_, “산업정책의 適正時點과 需要構造에 대한 경제사적 연구”, 『경제학논집』, 제6권 제2호, 한국국민경제학회, 1997, pp. 567~591.
  15. \_\_\_\_\_, “학교교육(schooling)과 산업”, 『經濟學研究』, 제45집 제1호, 한국경제학회, 1997, pp. 189~214.
  16. \_\_\_\_\_, “供給側面에서 본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 時點에 관한 경제사적 연구”, 『外大論叢(인문·사회과학 편)』, 제17집, 부산외국어대학교, 1997, pp. 683~705.
  17. \_\_\_\_\_, “再生産과 流動性”, 『경제학연구』, 제46집 제1호, 한국경제학회, 1998, pp. 233~254.
  18. \_\_\_\_\_, “후발산업화와 노동”, 『국제경제연구』, 제4권 제3호, 한국국제경제학회, 1998, pp. 129~147.
  19. \_\_\_\_\_, 『후발공업국의 발전전략과 산업경쟁력: 19세기 독일의 경쟁력 우위원천』,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1999.

20. \_\_\_\_\_, “대외의존과 경제구조: 1970년대 중화학공업과 대외의존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경제연구』, 제4권, 한국경제연구학회, 2000. 6, pp. 171~191.
21. \_\_\_\_\_, “정부인가 시장인가: 1980년대 중화학공업 조정 이후의 효율성과 시사점”, 『국제경제연구』, 제7권 제1호, 한국국제경제학회, 2001. 4, pp. 213~231.
22. \_\_\_\_\_,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정책과 재정정책”, 『한국국제경제학회 2001년도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2001. 12, 한국국제경제학회, pp. 933~956.
23. 유정호, “1970년대 중화학공업정책이 자본효율성과 수출경쟁력에 미친 영향”, 『한국개발연구』, 제13권, 제1호, 1991 봄, pp. 65~113.
24. 이기영, 『정책금융제도의 현황,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한국조세연구원, 1994.
25. 이병기, 『한국경제의 성장요인과 산업정책의 역할』, 한국경제연구원, 1998.
26. 이성순, 『정부주도형 산업구조정책의 성과와 과제』, 전국경제인연합회, 1988.
27. 이제민, “후발산업화의 역사적 유형과 한국의 경제발전”, 『경제사학』, 제26호, 1999, pp. 71~94.
28. 이해주, 『한국경제발전론: 한일비교경제사적 접근』, 부산대학교, 1989.
29. 재무부, 『재정투융자백서』, 1982.
30. 한국개발연구원,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연구보고 82-05, 1982.
31. 韓國開發研究院, 『産業政策의 基本課題와 支援施策의 改編方案』, 연구보고 82-09, 1982.
32. 한국산업은행, 『조사월보』, 1979~1985.
33. 한국은행, 『국민소득계정』, 1987.
34. \_\_\_\_\_, 『국민투자기금통계』, 1974~1980.
35. \_\_\_\_\_, 『경제통계연보』, 1974~1982.
36. \_\_\_\_\_, 『조사통계월보』, 1976~1982.
37. Agarwala, R., 『개도국의 가격구조 왜곡과 경제성장』; 박순철·성용모 역,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 1984.
38. Amsden, A. H.,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39. Gillis, M., “The Role of State Enterprises in Economic Development,” *Social Research*, vol. 47, no. 2, 1980, pp. 254~255.
40. IMD, *The World Competitiveness Report, Lausann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2000~2001.

41. Kim, J. I. and L. Lau, "The Sources of Economic Growth of the East Asian Newly Industrialized Countries," *Journal of the Japanese and International Economics*, 1994, pp. 235~371.
42. Krueger, A., "Asian Trade and Growth Lessons,"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and Proceedings* 80, no. 2, 1990.
43. Krugman, P., "The Myth of Asia's Miracle," *Foreign Affairs*, vol. 73, no. 6, 1994, pp. 62~78.
44. \_\_\_\_\_, "What are the Lessons of Asian Growth," 광복 50주년 KIET 국제학술대회, 1995.
45. Kwon, J. K., "The East Asia Challenge to Neoclassical Orthodoxy," *World Development*, vol. 22, no. 4, 1994.
46. Lal, D., *The Poverty of 'Development Economic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85.
47. Lee, Jai-min, "Selective Intervention and Manufacturing Success Story in Korea," *The Fourth Seoul Journal of Economics International Symposium*,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6.
48. Lucas, R. E., "On the Mechanics of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1988, pp. 2~42.
49. Noland, M., "The Impact of Industrial Policy on Japan's Trade Specialization,"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LXXL, May, 1993.
50. Norsworthy, J. R. and D. H. Malmquist, "Input Measurement and Productivity Growth in Japanese and US Manufacturing," *American Economic Review*, 1983, pp. 947~967.
51. Pack, H. and L. E. Westphal, "Industrial Strategy and Technical Change: Theory Versus Reality," *Journal of Development of Development Economics* 22, 1986, pp. 87~128.
52. Pack, R., "The Role of Government on Overcoming Market Failure: Taiwan, Republic of Korea and Japan," in H. Hughes (ed.), *Achieving Industrialization in East Asia*,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pp. 129~163.
53. Park, Y. G., "The Features and the Development Strategies of German Industrial Technology from the 19th Century to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The*

- Korean Economic Review*, Vol. 12, No. 2, The Korean Economic Association, Winter 1996, pp. 243~260.
54. \_\_\_\_\_, "Market Division and Industrial Structure: Strategies for the Competitive Edge of the German Steel Industry in the Nineteenth Century," *The Korean Economic Review*, Vol. 15, No. 2, The Korean Economic Association, Winter 1999, pp. 235~252.
  55. Rodrik, D., *Getting Interventions Right: How South Korea and Taiwan Grew Rich*, NBER Paper, no. 4964, 1994.
  56. Romer, P., "Increasing Returns and Long-run Growt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4, 1986, pp. 1002~1038.
  57. Sarel, M., *Growth in East Asia: What We Can and What We Cannot Infer*, IMF Economic Issue 1, 1997.
  58. Stern, J. J., Kim, J. B., Perkins, D. H. and J. H. Yoo, *Industrialization and the State: The Korean Heavy and Chemical Industrial Drive*, Harvard Institute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1995.
  59. Wade, R., "The Role of Government in Overcoming Market Failure: Taiwan, Republic of Korea and Japan," in H. Hughes (ed.), *Achieving Industrialization in East Asia*,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pp. 129~163.
  60. \_\_\_\_\_, *Governing the Market: Economic Theory and the Role of Government in East Industrializa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61. Westphal, L. E., Rhee, Y. W. and G. Pursell, *Korean Industrial Competence: Where It Came From*, World Bank Staff Working Paper 469, World Bank, 1988.
  62. Wolf, C. Jr., *Markets and Governments: Choosing between Imperfect Alternatives*, The Rand Corporation, 1988.
  63. World Bank, *The East Asian Miracle: Economic Growth and Public Polic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64. Young, A., "A Tale of Two Cities: Factor Accumulation and Technical Change in Hong Kong and Singapore," in O. Blanchard and S. Fischer (eds.), *NBER Macroeconomic Annual 1992*, MIT Press, 1992.
  65. \_\_\_\_\_, "Lessons from the East Asian NICS: A Contrarian View," *European*

*Economic Review*, 1994, pp. 964 ~ 973.

66. \_\_\_\_\_, "Tyranny of Numbers: Confronting Statistical Realities of the East Asian Growth Experience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09, no. 3, 1995, pp. 641 ~ 680.